

新韓國建設과 科學技術政策의 새로운 課題

金 鎮 炫
前 科學技術處 長官

'93. 4. 8. 롯데호텔에서 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조찬회에 강사로 초청된 김진현(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강연내용을 수록한 것임

I. 序 言

저는 1990년 11월 10일 뜻밖에 科學技術處 長官이 되어 1993년 2월 25일까지 2년 3개월 16일동안 재직하였습니다. 저는 최초의 非科學技術界 出身 長官이었으며, 官界나 政界 등 權力機關을 거치지 않고 바로 國務委員이 된 최초의 專門言論人이었습니다.

저는 늘 國務委員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科學技術處 長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大韓民國의 科學技術政策은 科學技術處만을 위한 또는 科學技術界만을 위한 또는 科學技術人만을 위한 정책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科學技術處 公務員들의 조회석상에서 저 자신이나 어떤 특정인에게 충성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앞에 걸려 있는 太極旗와 거기에 담긴 大韓民國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강요하다시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大韓民國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가 당연히 그리고 결과적으로 科學技術界에, 科學技術人들에게, 科學技術處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 社會共同體, 이 民族共同體의 生存과 平和와 發展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이어야 한다면, 바로 최일선의 研究室의 研究員들이 우리 경쟁상대의 연구원들보다 좀 더 성취에 몰두하는데 最優先이 두어져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研究所의 리더십이나 행정은 競爭과 協同, 創造와 革新에 충만한 연구실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정부의 정책도 이들의 성취를 위한 財政, 制度, 計劃의 끊임없는 개선, 그리고 틀과 전략과 비전의 제시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科學技術政策에서 그리고 科學技術人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研究室에도 民族主義的 熱氣를 불어 넣으려 노력하였습니다. “科學엔 國境이 없어도 科學者에겐 國境이 있다”는 말을 진짜 연구가 깊어지고 경쟁이 심한 연구영역에 종사하는 科學技術人들은 더욱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發明도 發見도 哲學이다”라는 진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근본은 전문언론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장관 재직중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특별히 틈이 넓은 우리나라 科學技術

界와 非科學技術界를 연결하여 상호 연계시키는 하나의 주춧돌을 놓고 싶은 것이 제 작은 所望입니다.

지난 2월 25일 「新한국 創造」의 기치를 내건 새정부,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改革」을 통하여 “땀 흘린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 “정직한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고, “政治·經濟·社會全般에 걸쳐 ‘韓國病’을 치유하고, 새로운 國際秩序와 統一에 대비하는 역사적 소명”을 내걸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이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未來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4,300만 國民 모두의 마음과 생활속에 뿌리내리고 확산되길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韓民族이 한세기전 西勢東漸앞에 맥없이 주권과 독립을 잃은 것도, 반세기전 美·蘇 霸權時代의 해방이 독립이 아닌 분단과 전쟁으로 악순환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美國·日本·中國·러시아라는 4대 강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었고, 결국 그들과 대등한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中進國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는 物理力으로서의 科學技術力이요, 또 하나는 精神力·氣力으로서의 社會共同體의 道德力입니다. 科學技術力과 道德力이 둘이 합쳐야 진정한 民族共同體, 國家共同體, 社會共同體의 힘이 생깁니다.

産業·經濟·貿易競爭力의 기초로서의 科學技術이요, 社會公共福祉와 間接資本施設 그리고 環境改善을 위한 기초로서의 과학기술이 앞서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고 국가정책에서 科學技術指向이 모자라고 모방에 만족해서는 한 企業, 한 共同體, 한 機能, 한 國家, 한 民族의 힘을 발할 수 없습니다.

貿易戰爭이 産業構造改善과 産業競爭力 전쟁으로, 그러다가 결국 知的財産權 싸움으로 종착하는 까닭은 지적재산권을 만드는 科學技術力이 競爭力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科學技術力이 높다 해도 한 社會, 한 國家의 道德力, 특히 지도자들의 道德性에 현저한 결함이 있을 때 그 사회 그 國家의 힘은 統合되지 않고, 아무리 큰 物理力이라 해도 한 부분의 物理力으로 끝날 뿐 共同體의 힘, 國家의 힘, 民族의 힘으로 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科學技術力이 그리도 높은 蘇聯과 東歐의 해체 과정에서 科學技術力만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후 日本의 科學技術發展過程과 스위스의 2백년 지속되는 세계 유일한 發展成功事例에서 道德力의 역할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 지도자들도 현재 그리고 미래 情報知識社會의 기초인 科學技術을 폭넓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者가 역시 社會指導者로서 또는 社會共同體의 구성원이요 수혜자로서 높은 道德性과 倫理觀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진전되고 있는 新國際秩序의 참 모습을 개관한 후, 韓國의 選擇이 先進國 進入이어야 하는 이유, 先進國으로 가는 길목의 障礙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I. 最近의 世界情勢와 韓國

冷戰體制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障壁이 무너지고 蘇聯에서 共產黨이 몰락하던 날, 이제 세계에는 평화가 왔다고 환호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도 지난 반세기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하였던 蘇聯·中國은 물론 東歐圈 國家와 국교를 수립하여, 南北統一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환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세계의 지배구조가 종전의 軍事力 중심에서 經濟力과 技術力 중심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며, 세계정치

多極化와 民族主義가 새로운 이념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힘」이 없는 나라의 처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美國에서 클린턴 行政府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의 貿易戰爭이 더욱 가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美國의 商務部는 금년 1월 25일 韓國 등 19개국의 鐵鋼製品에 대하여 덤핑예비관정을 내린데 이어, 2월 1일에는 EC산 공공설비의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美國의 行政府와 議會에서는 슈퍼 301조의 부활을 강력하게 시사하거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美國의 이와같은 태도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종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즉, 미국의 덤핑예비관정이 내리자마자 그 이틀후 캐나다는 美國등 6개국의 鐵鋼製品에 대해 덤핑예비관정을 내렸고, 日本도 2월 3일부터 中國産 鐵鋼原料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日本 通商産業省의 오카마쓰 소자부로(岡松壯三郎) 通商政策局長은 금년 1월 25일 記者會見을 갖고 “만약 美國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日本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報復措置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보복관세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2월 3일 보도되었습니다.

이와같은 先進國들의 立場轉換은 우리에게 冷戰時代보다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冷戰體制 保護幕이었고 지금도 政治·軍事的으로 우리와 盟邦關係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만 보더라도, 知的所有權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것을 科學技術協力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애써 만든 半導體와 鐵鋼의 美國市場上陸을 완강하게 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先進國들이 자국의 産業과 國民生活 便益增進을 위해 감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卓越한 技術力을 보유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世界情勢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현상은 일본의 政治·軍事的 부상입니다. 미야자와 總理는 히로시마 放送局에서 행한 1993년도 신년사를 통해 “美國은 새 行政府가 들어설 때마다 시끄럽게 떠들지만 두세달만 지나면 곧 수그러든다”라고 당당한 자신감을 표명하였으며, 금년 1월 16일 방콕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ASEAN과 經濟뿐만 아니라, 政治·安保 分野에서도 긴밀한 協力關係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ASEAN 확대외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安保機構 설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각각 주장하여 「新 大東亞共榮圈」구상은 은밀히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日本의 世界 勢力化 전략은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日本의 UN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 진출요구와 관련하여 워런 크리스토퍼 美國務長官은 금년 1월 25일 “이제는 UN을 1946년의 현실이 아니라 1993년의 현실에 맞추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日本과 獨逸의 常任理事國 선출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캄보디아에 自衛隊를 파병한데 이어 3월 26일에는 모잠비크에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世界勢力化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바로 1세기전의 역사를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까. 즉, 1876년 江華島 條約 이래 日本에 기울어 가던 우리나라 輸入商品市場의 구조가 1893년에는 일본 50.2%, 청나라 49.1%, 러시아 0.7%로 일본의 우위로 전환되어 우리 경제의 對日束縛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10년의 비극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역사의 비극은 아직도 세계각지에 남아 있습니다. 脫冷戰과 함께 대두된 도처의 민족주의 운동의 여파로 옛소련 우주 베크共和國에 살고 있는 18만명의 우리 同胞는 금년내에 우주베크를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고, 1년이상 內戰이 계속되고 있는 타지크共和國의 韓人僑胞 1만3천명중 절반정도가 러시아 원동지방 등으로 피난을 떠났습

니다. 뿐만 아니라 사할린의 3만동포와 60만 재일동포에 대해서도 아직은 만족할 만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實力입니다.

III. 新韓國의 進路는 先進國 진입

우리나라가 반드시 先進國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일부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國民所得이 30여년 전의 100달러, 20년전의 300달러에서 6,700달러로 높아져 일부 가진 사람들은 서양사람보다 더 큰 집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면서 살고 있고, UN에도 가입하여 國際社會에서의 위상도 강화되었고, 무사하 치른 서울올림픽에서 世界 4強에 도약하였으며,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우리 선수가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56년 동안의 한풀이도 했는데, 이만하면 되었지 힘들게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진국에 성공했으니 현재를 연장하면서 시간만 가면 선진국이 될 것이 아니냐고 현실에 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生存은 불행하게도 매우 특수한 地理的이고 時代的인 제약속에 있습니다. 先進國이 되지 않고도 後進國 또는 中進國으로서 國家의 生存, 民族과 國民의 福祉, 共同體의 安全이 유지될 수 있다면 한세대의 발전에 만족하고 쉬어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만은 先進國이 되지 않고는 國民生存의 유지, 民族의 보존, 共同體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세계 최대 海洋國家인 美國·日本과 세계 최대 大陸國家인 中國·러시아에 地政學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韓·日 관계는 왜구이래 천년묵은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日本이 內亂을 평정하고 國力을 키웠을 때 그 대외적인 첫 표현은 항상 韓國侵略이었습니다. 16세기의 壬辰倭亂이 그러하였고, 20세기초 명치유

신이후 한말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세계의 資本力 1위, 民生技術 1위, 軍事力 3위로 발돋움한 日本의 힘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로 갈지, 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갈지, 中國 혹은 韓國,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일본이 自國天下를 統一했거나 大國을 지향했을 때 한국을 그 첫번째 무력 사용의 試驗臺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日本의 野黨까지도 일부 동조하고 있는 바와같이 憲法을 개정하여 武力使用이 허용되면, 남북간의 분쟁발생시 日本軍隊가 平和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 韓半島에 상륙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中國과의 2천년 관계도 유사합니다. 中國大陸을 장악한 국가에게 동쪽의 작은 韓半島는 항상 눈의 가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隋와 唐의 고구려 침략, 삼국통일 과정에 대한 唐의 개입, 元의 고려지배, 淸의 병자·정묘호란, 그리고 東學亂 개입등이 그것들이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늦은 구한말에야 한반도에 발을 들여 놓긴 하였지만, 동방진출의 橋頭堡는 언제나 동해와 한국이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血盟인 美國도 韓國을 아시아 최후의 보루로 활용해 왔고 앞으로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의 외형에서는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周邊 4大強國과의 관계를 보는 밖의 눈은 상당히 다릅니다. 日本 東京에서 발행되는 VOICE잡지의 1991년 11월 호에는 「韓半島는 日本이 左右한다」라는 제목아래 黑田勝弘 産經新聞 서울지국장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美國·中國·蘇聯 및 韓國이라는 한반도 정세에 관계있는 당사자 거의가 지금이야말로 韓半島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日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때에 일본만이 그같은 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만일 이것이 일본인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자부하던 政治主權獨立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외교의 장을 크게 확장한 韓·中修交에 대하여 프랑스 언론은 “이로서 中國은 南·北韓, 臺灣 등 3개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석3조의 입장에 서게 됐다”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KAL007기 블랙박스소동도 러시아의 對韓태도에 대해 여러가지를 생각해 합니다.

이러한 사실 모두는 우리가 日本·中國·러시아·美國이라는 世界 4大強國을 극복하고 그들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명실상부한 獨立國家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先進國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만 하는 두번째 이유는 統一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統一의 조건은 반드시 주변 강대국은 물론 세계 각국과 外交的인 協商力을 갖추는 때만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VOICE잡지의 1992년 4월호에는 「한국의 일본 주적론의 진의」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南北統一은 韓國 民族主義의 상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중인 日·北韓 交渉은 상당히 중요하다. 韓半島의 民族主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日·北韓 交渉을 잘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도 韓半島 統一에 대한 자세를 언제 어떻게 바꿀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4大強國에게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할때 통일은 환상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内部的으로도 현재와 같은 나라살림으로는 통일후 10년 동안에 3,000-5,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統一費用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7천만 민족의 숙원인 統一의 協商力과 經濟力을 갖춘다함은 곧 先進國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세번째 이유

는 2차대전후 開發經濟學과 技術經濟學의 가르침입니다. 후진국은 尖端技術指向보다 中間技術·適正技術에 의해 후진국의 장형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開發經濟學에서 선진국 경제학자들은 先進國 그룹의 막내와 後進國 그룹의 큰형중에서 韓國이 그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에 대하여 後者를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의 經驗的 現實은 後進國과 先進國의 隔差擴大, 後進國의 外債增大, 第3世界의 “하나의 世界”로서의 몰락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오늘날 제3세계와 반동그룹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中間技術의 성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技術先進國으로 가야 하고 선진국이 되어야만 主權과 福祉를 누릴 수 있고, 生存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世界勢力的 再編成 過渡期인 1990년대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21세기까지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주변국가의 완벽한 屬國으로 전락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대국 군대의 진주에 의한 고전적인 방식의 植民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經濟力과 技術力이 武力을 대체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우리 스스로 經濟를 영위할 수 없고, 外交力을 발휘할 수 없고, 그리하여 國事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때 그것은 틀림없는 屬國이요 植民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언제 닥쳐올지도 모를 실제입니다. 大陸이나 海洋에서 야심찬 영웅이 나타나거나 國際秩序가 변할 때마다 희생이 되고 짓밟혔던 불행한 우리의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V. 新韓國 創造의 障礙物

1. 對內的인 障礙物

우리나라가 新한국 창조, 즉 선진국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대내적인 요소는 基礎資源의 취약과 國家共同體 意識의 결여, 論理와 行動의 獨創性 미흡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

습니다.

첫째, 基礎資源側面에서는, 우리나라의 國土面積은 南·北韓을 합하여 거주 가능한 지구 면적의 2%, 南韓만을 보면 0.9%정도이며, 經濟的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地下資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原子力問題 때문에 국내의 전국과 전세계의 중요한 原子力 産業國家를 돌아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빈터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日本이 人口가 많다지만 홋카이도에 가보면 해안에 몇십 km의 빈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별 1호」 科學衛星을 발사하기 위해 남미 기아나에 가보니 衛星發射를 위해서 몇천만평 정도의 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宇宙研究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는 實驗室에 돈이 없는 것보다는 「空間問題」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都市國家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首都圈 集中이 최극에 달한, 어떻게 보면 최악에 달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천안까지 이르는 반경 80km안에 4,300만 인구의 절반인 2,000만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지금 500만대의 차를 가지고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自動車 需要를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人口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南·北韓을 합해 7천만명으로서 세계 53억인구의 1.3%, 南韓만을 볼때 0.8%수준이며, 內需經濟의 最小臨界規模라고 지적되는 1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對外指向的인 經濟活動을 영위할 수 밖에 없고,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技術과 商品을 가져야만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國家共同體 意識의 결여입니다. 18-19세기의 後進國인 獨逸·러시아·美國·日本은 모두 1백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 國家主義·民族主義·帝國主義라는 자기중심 정치질서의 동질성 위에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밖에서 보면 국내의 갈등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植民地와 領土擴張의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밑 뿌리에서 본다면 중세의 基督教의인 倫理에 의한 강한 社會統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년이라는 예외적으로 짧은 기간의 壓縮成長이 先進國 中心의 國際統合 질서위에서 이루어졌고, 이념적으로는 自由·開放體制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상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력한 社會共同體·國家共同體 意識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우리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건설중에 있는 나라요 형성중에 있는 나라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公과 私가 분명하지 않아 私人中心의이고 個人中心의이며 家族中心의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市民·社會共同體와 國家라는 경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國際化로 넘어가는데 낮지 않느냐는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企業들의 태도를 보면 그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國際化가 진전되어 칸트가 생각했던 「世界國家」형태로 진전될지, 아니면 국가의 권력보다는 多元的인 國際機構 中心으로 이행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만, 분명코 그 국제화 시대를 民族國家·國民國家라는 Nation State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나라와 私組織·個人組織 單位에서만 활동하다가 국제화로 이행하는 나라는 그 다음단계에서 큰 차이가 나리라 확신합니다. Nation State의 단계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거쳐서 가는 나라는 社會共同體의 동질성과 활력을 갖고 국제화 시대에 순조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國家 共同體나 民主市民社會 共同體의 경험을 갖지 않고 私人組織에서 바로 國際化時代로 넘어갔을 때 그 社會 그 民族 그 文化는 解體되고 形骸化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思想論爭·體制論爭·統一論爭·民主主義論爭에는 우리의 특수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獨創性과 創意性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기 전이었던 19

89년 May Day 며칠전에 延世大 言論弘報大 學院의 강의를 위해 정문에 들어섰더니 「가자 北으로」 「全世界 勞動者의 解放을 위해…」라는 등의 懸垂幕이 白楊路 양편 나무 나무마다 한 나무도 비우지 않고 빨갭게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인촌 기념관에서 열렸던 마가렛 대처 여사의 강연이 끝나자 마자 수백명의 학생들이 좌익에서는 “保守 反動 第1號”이었어야 할 그녀에게 우뢰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共產主義의 宗主國이었던 구 소련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들이 3년전에 그렇게 외쳐 댔던 主體思想·勞動解放·民衆·統一 등 그런 낱말들이 정말 자기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사상과 체제였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근대화 100년 동안의 과정이 그랬듯이 바로 지금도 남의 세계, 밖의 세계의 모방과 유행만 쫓아 다니다가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건에 입각한 獨創性和 創意性이 담겨 있지 않은 논쟁이나 체제가 주장되고 확산되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對外的인 障礙物

대외적인 障礙物의 첫번째는 새로운 개념의 「國境」입니다. 物理的 意味와 文化的 意味의 國境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치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國境없는 經濟, 地球化라는 의미의 國境입니다. 市場經濟體制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IBRD·IMF·GATT체제가 존재하는 한, 資本과 勞動과 商品과 서비스는 더욱 國際化·世界化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그대로 「國境없는 經濟」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經濟國境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關稅障壁이라는 전통적 수단으로 구분했으나, 지금은 고도의 기술이 체화된 “標準”과 “安全性”과 “環境”과 “規範”을 통해 국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技術國境」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선진국에서 우리 상품을 규제할 때 “標準”이 틀리다. 당신 나라의 표준은 우리 표준하고 다르니까 수출하고 싶으면 우리 표준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은 표준이라고 하지만 그 표준에 맞게 제품을 만들려면 그에 필요한 機械裝置를 새로 바꾸어야 합니다. 設計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安全性」의 문제로서 당신나라 제품을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미세한 毒性이 있어 安全性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입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知的所有權」을 가지고 규제합니다. 우리나라의 半導體 業界가 선진국의 特許訴訟에 휘말려 엄청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環境問題」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거나 태우면 가스가 나와서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 상품을 수입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프레온가스(CFC) 함유물질 규제입니다. 우리는 CFC생산 世界6大 先進國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CFC생산 6대국의 마지막 차를 댔을 때인 1990년쯤엔 선진국들은 이미 CFC규제를 위한 몬트리올協定을 결론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CFC선진국이 된 직후에 CFC代替物質 研究開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초의 협정시한인 1999년말에서 다시 시한을 앞당김으로서 우리는 다소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나 先進國은 더 빨리 달아나고, 또한 우리를 밀어내려는 것이 그들의 戰略인 것입니다.

즉, 1992. 11. 23-25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4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프레온가스(CFC)의 生産·消費를 당초목표보다 4년 앞당겨 1995년말까지 전면 禁止키로 하고, 할론에 대하여는 6년 앞당겨 1993년말까지 生産·使用을 중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오존층 파괴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진 대체 프레온가스(HCFC)와 브롬화메틸을 新規 規制對象物質

로 선정하고, 그중 대체프레온가스(HCFC)의 生産·消費는 1996년부터 1989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2010년에는 65%로 감축한 후 2029년말까지 전면 禁止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3의 代替物質技術開發이 부진한 우리나라의 自動車·電氣·電子 등 관련산업의 輸出競爭力은 극도로 弱化될 것입니다. 현재의 CFC조차 生産못하는 後進國들은 全量을 先進國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原子力安全」이라는 이름의 규제입니다. 세계의 원자력 선진 26개국 이 모인 「原子力 供給國會議(런던클럽)」는 1992. 3. 31-4. 3에 바르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확산규제대상기술을 종래의 核物質·原子爐 등 「原子力 專用品」중심에서 數値制御工作機械·精密測定裝置·特殊카메라 등 일반산업 관련 65개의 「汎用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될 또 하나의 국경은 「國際規範」입니다. 예를들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1991년 6월에 개최된 閣僚 理事會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등이 國際貿易秩序를 왜곡시키는 원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992년 3월에는 科學技術 閣僚 理事會를 열어 민간에 대한 정부의 技術開發 支援施策 등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검토하는 「科學技術政策 實務委員會」를 구성키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가 企業의 技術開發促進을 위해 실시하는 特定研究開發事業과 같은 자금지원 체제의 강화는 더이상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번째의 對外的인 障礙物은 極東아시아 地域의 특수한 力學關係입니다. 최근 세계는 역내 국가간의 블록化와 地域化를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확대 실천하고 있습니다. EC와 EEA와 NAFTA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극동아시아지역은 南·北韓, 日本, 中國, 러시아만을 합해도 消費人口가 16억 정도로서 世界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尖端 技術·生産技術·基礎技術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우수한 勞動力과 天然資源은 물론 資本力까지도 완비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들은 얼룩진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의 한반도에 얽힌 政治·軍事·經濟情勢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시일내의 結合展望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對外指向的인 經濟發展 戰略을 지속해야 되는 우리나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相互補完的이거나 公正競爭的인 交易關係보다는 우리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덩핑공세를 퍼서 우리 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방식의 「敵對的 交易關係」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日本의 자세가 눈앞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와 개발분야가 차별화되지 않는 中國의 급속한 工業化도 우리의 미래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보따리 장사로 날라오는 그런 규모로도 國內의 農水産物市場이 교란되었는데, 중국조차 GATT에 가입하여 差別關稅를 보과하지 못할때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農水産業은 말할 것도 없고, 製造業·建設業·서비스業과 教育部門까지도 中國과 自由競爭에서 이길 부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先進國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自然條件·資源條件·4強과의 地政學的 條件은 백년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땅 大韓民國 안에 사는 國民들의 能力과 意志와 智慧만이 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國家의 “힘”의 조건만이 변할 수 있을 뿐입니다.

V. 어떻게 가야 하는가

1. 眞正한 改革에 앞장서자

새정부에서도 改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改革을 하지 않으면 國家로서도, 組織으로서도, 한 人格으로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히 말하는 政治變化期의 개혁이라는 말뜻이

상의 역사적 의미의 改革期를 맞고 있습니다.

첫번째 개혁은 「正常化」입니다.

우리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될 때 바로 그것이 正常化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은 非正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척결되고 있지만 腐敗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그러한 行政, 그러한 政策에서 졸업하는 것이 정상화의 첫출발입니다. 正常化라는 것은 찾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教科書에서 보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節約해야 된다, 勤勉해야 된다, 誠實해야 된다”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生活의 正常化이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도 正常化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의 개혁의 첫걸음은 정상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개혁은 「國際化」입니다.

우리는 舊韓末의 西勢東漸時代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지 못하고 外交力을 발휘하지 못하여 마침내 日本의 植民地가 된 눈물겨운 역사가 있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美·日·中·露의 4대強國이 그때와 분명히 다른 점은, 그때의 日本·淸·러시아·美國은 세계의 「周邊國家·地域國家」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의 助演이 아닌 「主演國家」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70년대 이후 「日本의 時代」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中國의 時代」가 온다는 이야기를 中國사람들 자신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현재의 中華人民共和國에 臺灣과 東南亞의 6,000만 화교를 합친 中國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에 日本의 시대와 中國의 시대라는 엄청난 成長軸의 가운데에 끼어서 우리의 독자성을 찾아야 되는 숙명에 처해 있습니다. 技術에 있어서도 國防에 있어서도 政治에 있어서도 각자의 매일매일 生活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獨自性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숨막히는 4強體制의 한 가운데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均衡적인

外交感覺을 체득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中國만을 國際關係의 상대로 삼아왔던 역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때문인지, 아직도 여러나라를 동시에 관리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실정이며, 상대국가를 단순히 「敵」과 「同志」로 구분하는 二分法的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敵은 무조건 나쁘고 友邦은 모든 면에서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友邦이라도 1mm단위로 微分化·差別化된 友邦概念이 필요하고 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조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輕南重北의 사상과 냉전체제에서 형성된 重南輕北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中國과 러시아라는 북쪽나라와 日本과 美國이라는 남쪽나라를 균형있게 대하는 外交的인 노력이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에 배어야 하겠습니다.

개혁의 세번째 요소는 철저한 「民族主義」체득입니다.

「國際化」를 주장하면서 「民族主義」를 강조하는 것은 時代錯誤의이며 相互矛盾의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진정한 民族主義가 정착될 때 진정한 國際化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韓國人들은 진정으로 민족주의적이어야 주변의 中國과 日本과 美國과 러시아를 극복할 수 있으며, 中國과 日本과 美國과 러시아를 극복한다함은 바로 國際主義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운명입니다. 보스니아나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아르메니아나 아젤바이젠의 民族主義는 그 지역의 民族主義일 뿐 國際主義가 될 수 없으나, 한국의 民族主義의인 삶은 그 자체가 바로 國際主義的이고 世界主義的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민족주의적인 단결을 못했던 불행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서 自己와 家庭은 있습니다. 家門도 있습니다. 同窓도 있습니다. 같이 고통을 당하니까 民族共同體의 형식이 恨으로도 있고 노래로도 있었으나, 實體로서의 民族共

同體는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도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抗日運動이라는 민족적 거사에서 四分五裂되었습니다. 舊韓末에 진정한 親露派도 없었고, 진정한 親日派도 없었고, 진정한 親清派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 재산 모으는 일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民族主義에 입각한 國際主義를 만들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모두는 民族主義的 共同體의 概念과 行動에 충실한 새로운 것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적 민족주의이거나, 소비니즘이나 징고이즘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韓國의 민족주의적인 생존에 철저히 하려면, 美國을 철저히 알아야 하고 日本을 철저히 알아야 하고 中國을 철저히 알아야 하고 러시아를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國際主義的인 感覺과 體驗과 基盤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생존은 운명적으로 民族主義에 철저히 할수록 國際主義者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으며, 國際的인 開放을 위해서도 우리는 철저한 民族主義的인 價値와 民族主義的인 歷史와 民族主義에 대한 理念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公職者라는 意識과 姿勢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유의 2分法的이고 黑白論理的인 자세와 의식이 강해서 公職者의 의미를 公職者에만 한정시키는 慣行이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의 公職者에게는 철저한 規律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도 民間部門의 指導者와 管理者는 規則을 위반해도 관용되는 풍토가 있습니다. 또 그런 「民間의 特權」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착각까지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民間部門은 私生活의 秘密을 유지해도 좋고 公職者는 下級 公職者에서부터 長官에 이르기까지 私生活의 秘密이 유지되지 않

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또 公職者는 財產登錄을 해야 하지만, 民間部門의 指導者는 財產登錄을 안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非常識도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法律的으로는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國民의 稅金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면 公共部門이고, 稅金이 아닌 自己收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면 民間部門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公權力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法律的인 차이일뿐입니다. 서울시의 公職者 마크를 달고 도로의 청소를 하고 있는 清掃夫 公職者에게 公職者像을 요구할 수는 없듯이, 비록 民間部門이라 할지라도 그 管理者는 분명히 公職者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公職者에 한해서만 公職者이고 社會各界의 指導者와 管理者는 公職者가 아니기 때문에 民間部門은 끝까지 私人이어도 괜찮다는 인식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때 言論과 宗教와 大學과 藝術과 社會 公共團體, 그리고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企業의 管理者도 분명히 公人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벌이라는 이름의 企業 所有者에게는 강한 倫理的 基準을 요구하면서도 그 法人의 正常的인 運營與否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個人에 대한 倫理的인 추궁과 더불어 公組織인 그 企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하여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商法上의 株式會社는 민간부문이기는 하되 公的인 機關이지, 個人의 私機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證券去來所에서는 하나의 지침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民間企業조차도 그 기업에서 최고의 급여를 받는 任員 5名에 대해서는 왜 그만한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와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서류를 株主總會 개최전에 株主들에게 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市場經濟原理에 충실해서 民間企業의 活動에 일체 제한을 가하지 않는 美國式 市場經濟에서조차도

그와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株式會社가 民間部門의 것이니까 個人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株式會社가 아무리 적자투성이고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獻金을 잘하고 寄附를 잘하고 廣告·宣傳을 잘하면, 社會奉仕를 잘하는 기업으로 착각하는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은 법률상 세금을 쓰느냐 아니냐에 의해 나누어지기는 하되, 民間部門이라고 해도 株式會社라는 法人形態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분명히 公組織이고, 그 조직이 개인의 것이어서는 안되고, 公益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가 公인과 私인, 公組織과 私組織, 민간부문안에서의 私的機能과 公的機能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2000년까지 7大 科學技術 先進國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先進國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에 전개될 環太平洋時代에 主役國家·主役民族으로 되기 위해서는 2010년경까지는 오늘날의 경제 G7선진국, 그리고 일본과 겨룰 수 있는 지경에 올라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0년까지 科學技術分野에서 먼저 G7圈안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에 美國이라는 G1, 日本이라는 G2, 獨逸이라는 G3를 목표로 할 수는 없습니다. 美國·日本·獨逸·프랑스·英國·이태리·캐나다의 순서로 되어 있는 科學技術 G7國家중에서 캐나다나 이태리수준 정도까지는 올라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 선진국인 美國·日本·獨逸이라고 하여 모든 과학기술에서 한결같이 1등, 2등, 3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술에서는 1등을 하고, 어떤 기술에서는 열등합니다. 그러나 우수하고 열등한 과학기술들이 합쳐져서 平均的인 意味에서 세계 1위, 세계

2위, 세계 3위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科學技術 7大 先進國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美國이나 日本이나 中國의 規模나 量을 목표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2의 美國, 제2의 日本, 제2의 中國戰略을 채택하기 보다는 좀 더 큰 스위스, 좀 더 큰 스웨덴의 길을 가야 합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모든 產業과 모든 技術을 일으켜서 先進國化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美國이나 日本이라는 세계 최강의 선진국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學問, 그러한 技術, 그러한 製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質과 內容에 있어서 競爭力과 卓越性을 철저히 유지하여 「작은 巨人」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日本克服의 「작은 巨人」이 되기 위해서는 「輕·薄·短·小」科學技術이 가져올 經濟·產業·國際交易의 파급효과에 면밀히 대처해야 합니다. 근대산업의 쌀인 鐵鋼만 하더라도 한 나라에 몇개, 큰 나라에는 몇십개, 전세계적으로 보면 8백여개의 大型 製鐵所가 있습니다. 문화혁명당시 모택동이 권장했던 동네 제철소 같은 전근대적인 철공소를 합치면 수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現代 및 未來產業의 쌀인 半導體칩은 지금과 같은 경향으로 가면 앞으로 2-3개 정도의 공장에서 전세계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輕·薄·短·小」의 科學技術이 가져오는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당신이 그런 종류의 「獨占」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종류의 「獨占」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의 「獨占」기술을 교환하지는 식의 경쟁이어서, 복수의 경쟁자라는 경제학의 시장개념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匿名의 多數供給者와 需要者를 전제로 하는 古典經濟學의 市場概念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될때 세계의 판도는 獨創的인 科學技術을 가진 극히 少數의 先進國과 그것을 가지지 못한 많은 多數의 後進國만이 존재하

는 兩極構造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첨예하게 二元化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核心要素는 현재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장 간절한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都市集中과 交通問題와 空間問題와 資源問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人口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都市化는 더욱 진전되고 있습니다. 消費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더 쓰게 됩니다. 教育을 더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後進國도 先進國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韓國의 特殊性과 韓國人의 特殊性 해결에 필요한 운명적인 paradaim 창조에 도전하여 성공하면 그 특수성들은 분명히 10년뒤 20년뒤에는 全世界와 全人類의 普遍性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先進國 進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에 우리도 7大 科學技術 先進國이 될 수 있다는 강인한 自身感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蓄積된 科學技術基盤과 빠르게 活性化되어가고 있는 研究開發活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研究開發 投資에서 세계 12위, 研究開發人力에서 세계 11위로 올라섰고, 2001년까지 研究開發投資를 國民總生産의 5%, 研究開發人力을 15.6만명으로 늘리려는 확고한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人力의 構造와 潛能力입니다. 우리나라는 研究開發活力이 가장 왕성한 25-44세의 年齡層이 1990년의 32%에서 계속 증가되어 1999년에 36.1%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國際學曆評價에서 만 9세 학생들이 算數와 自然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만 13세의 학생들이 科學에서 1위 數學에서 2위를 차지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科學技術 潛能力이 있습니다. 또한, 비록 日本植民地라는 한맺힌 비극의 퇴적이기는 하지만 周邊 4大強國과 유럽 등지에 약 1만2천여명의 우수한 僑胞科學技術者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귀중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우리

는 전쟁의 잿더미위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불과 30년만에 1인당 國民所得을 100달러에서 6,700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30년전에는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었으나 지금은 船舶과 自動車는 물론 情報化社會의 총아인 半導體와 全電子交換機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수준으로까지 비약한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國家共同體와 뜻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국가적 최우선과제인 科學技術革新에 정성을 바치기만 하면, 2000년대 7大 科學技術 先進國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VI. 結 言

우리는 1천년의 過去를 소화해 낼 威力과 1천년의 未來를 꿰뚫을 膽力을 가져야 하고, 내 이웃과 인류를 같이 끌어 안을 만한 道德力을 키워야 합니다. 거기에 科學技術力을 보태면 日本의 시대도 中國의 시대도 아닌, 한국·중국·일본·인도차이나·아세안·미국·러시아가 같이 중심을 이루어 평화롭게 발전하는 多元·普遍의 새 舞臺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하나의 成功에 안주하여 또 다른 하나의 失敗를 연출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쏟은 눈물에 멈추지 말고 未來開拓에 새로운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道德力과 科學技術力이 결합된 「質의 힘」을 키우는 데에 온 精誠을 쏟아부어야 하겠습니다.

歷史에 反復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過去에서 教訓을 얻지 못하여 改革을 못하면 不幸한 歷史를 반드시 반복하게 됩니다.

歷史에 反復은 없습니다. 우리가 未來開拓과 創造의 길에 눈물과 땀을 흘리고 魂과 生命을 던져 改革·變身할 때 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없습니다.

韓國의 21世紀 모습은 2001년에 가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1993년 한해의 운동으로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第2獨立運動의 각오로 21世紀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